

경북행복 BRIEF

Vol. 49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 September, 2023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이육열
주 소 39332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32
홈 페이지 www.ghf.or.kr

01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방안

권용신 |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김민주 |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2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김성훈 | 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김문근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03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경북행복재단의 역할과 과제

진재문 |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방안

권용신(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위원)
김민주(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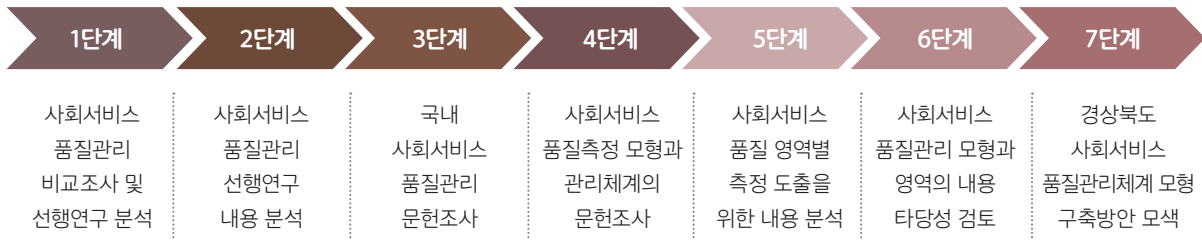
1. 연구배경 및 목적

- 사회서비스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고, 나아가 사회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측정체계**, 서비스 품질을 일정수준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회서비스 **품질보증체계** 및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지원체계** 등의 구축방안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모형개발 및 정책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함.
- **사회서비스 품질 및 품질관리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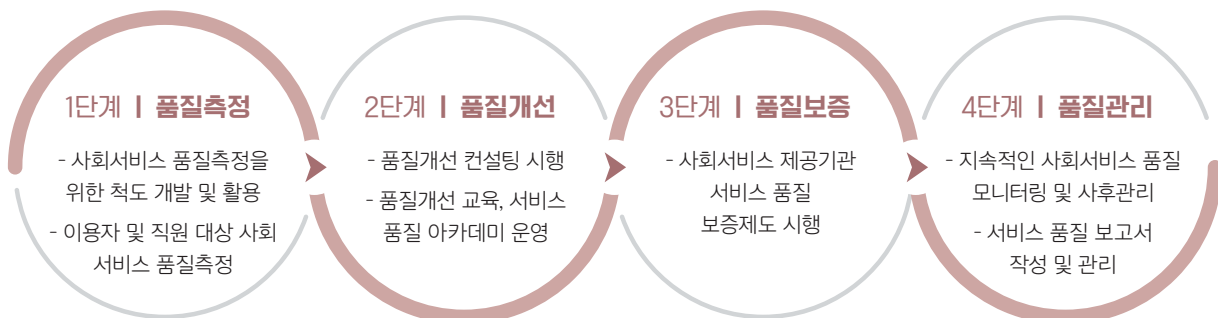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품질
: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한 것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사회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유지, 관리 그리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

· 연구내용 및 방법



2.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단계





3. 국내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유럽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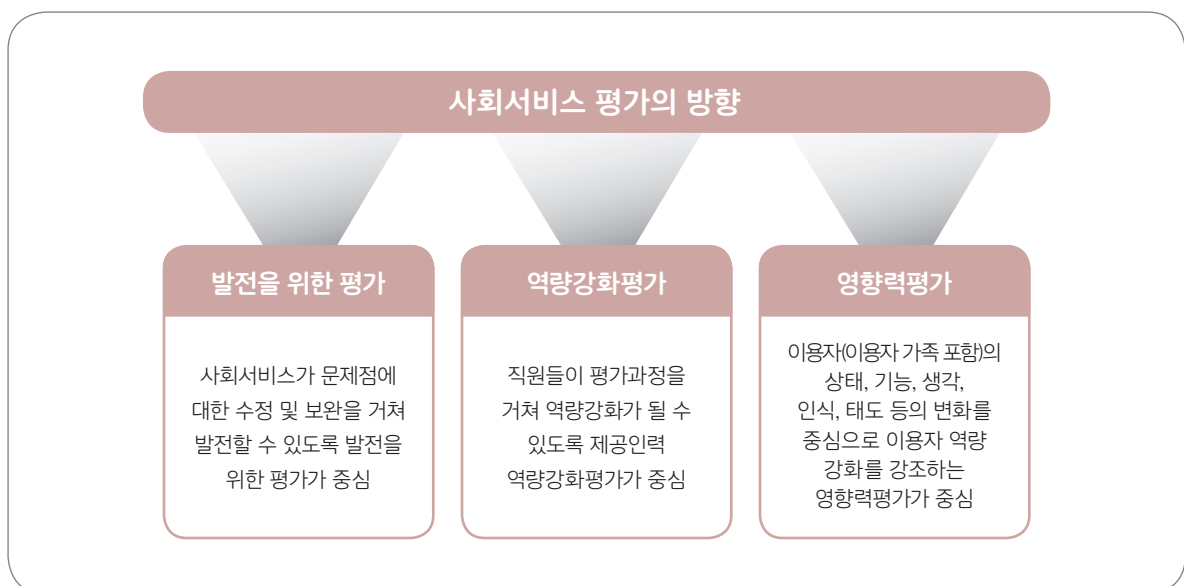
- 유럽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장기요양돌봄서비스, 아동돌봄서비스, 고용서비스 등 돌봄 중심의 정부 산하 기관 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품질관리는 품질모니터링, 품질인증(기준), 품질평가 등이며, 평가대상은 제공기관, 이용자,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함.

· 국내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문제점

- **문건중심의 품질평가** : 서비스의 내적 측면이 아닌 외형적인 문건이나 보고서 등 서류중심으로 추진되며, 이용자와 제공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제3자에 의한 품질평가** : 서비스 품질평가 과정에서 서비스 주체와 객체가 제외되고 있음. 서비스 품질은 일차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품질평가 참여가 필요함.
- **단순 산출중심의 정량적 품질평가**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증거(양적 및 질적 지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성과평가로 전환되어야 함. 성과평가는 투입과정산출결과(효과)의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평가, 제공인력의 역량강화평가, 이용자의 변화를 위한 영향력평가 등이 바람직함.
-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호한 정의** : 사회서비스 품질 정의, 제공기관 서비스 기준이나 규칙 준수여부 등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품질평가로 총칭하여 이뤄지고 있음. 사회서비스 품질은 직접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의해서 간접적으로 제공기관(인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의 영향력(impact)이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부재** : 사회서비스의 영향력평가는 결과부분으로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영역이 필요함.

·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바람직한 방향

- 사회서비스의 품질평가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증거(양적·질적 지표)를 통한 입증은 품질평가의 한계를 넘어 전체 서비스품질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서비스 성과평가로 전환되어야 함.
- 성과평가는 투입과정산출결과(효과)를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평가, 제공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 이용자의 변화를 위한 영향력평가임.





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모형 비교

- 최초 서비스품질관리모형은 SERVQUAL(Service Quality) 모델임. 이를 보완한 모델은 SERVPERF모형, EFQM모형, PQASSO모형 등이 있음. 국내 서비스품질측정과 관리를 위해 개발된 모형은 KS-SQI, NCSI, SKCSI, NDSC 등이 있음.
- KS-SQI 3.0 모형(한국표준협회)은 서비스품질영역을 서비스결과품질, 서비스상호작용품질, 서비스환경품질 및 사회적 품질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함.
- 공공서비스품질관리모형의 서비스품질은 국민들이 제공받은 서비스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로 정의하고, 서비스 품질을 다면적 영역으로 분류한 후 영역별 품질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음. 즉, 품질측정 강조, 고객만족도 및 서비스품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관리 등 잠재적 측면을 측정하여 종합평가하는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비스품질관리모형은 품질측정모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서비스품질의 다면성은 일반 영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측정모형인 SERVQUAL모형과 한국표준협회의 KS-SQI모형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음. SERVQUAL모형과의 가장 대별되는 차이점은 공공성이나 서비스결과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 점임. 즉, SERVQUAL모형은 서비스영역이 대부분 투입과 과정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KS-SQI모형과 이에 기반한 공공서비스품질모형은 결과영역 품질로 구성되어 있음.
- 공공서비스품질모형의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대부분 체계적 공공서비스관리모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고, 객관적인 서비스품질표준안, 품질기준 및 품질보증제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서비스품질관리 방안이 필요함.

5.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p>사회서비스 품질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유지, 관리 그리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 · 이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 · 이용자가 원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p>사회서비스 품질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과정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관계





6.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실태

·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전문가 대상 품질관리 관련 의견수렴(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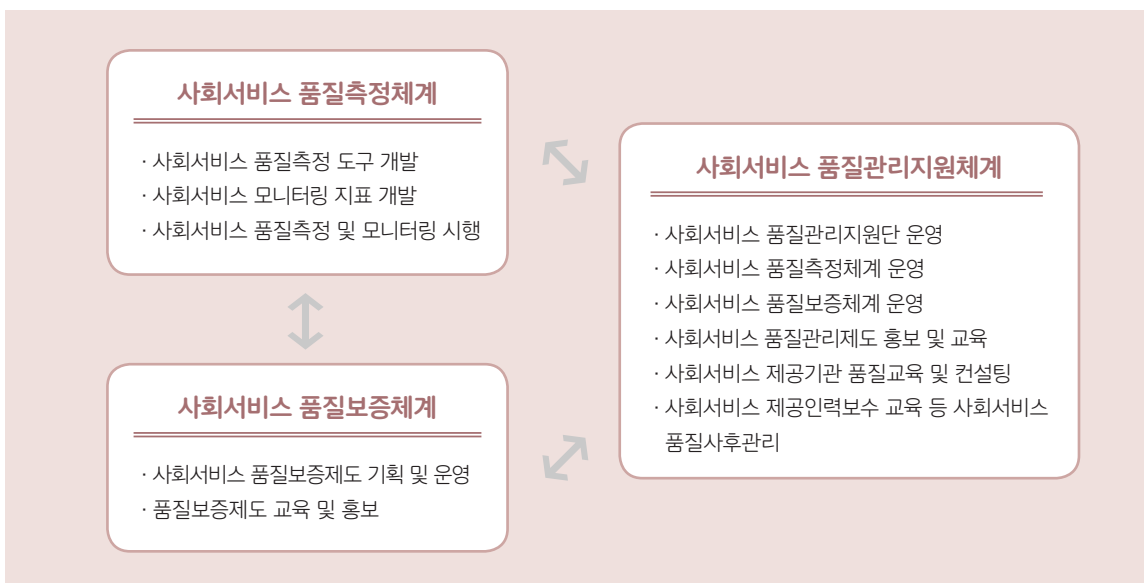
-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모형에 대한 필요성 인식 :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와는 달리 경북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모형이 필요함.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품질측정,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후관리/교육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특히, 품질관리시행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의 방안으로 품질측정결과 점수가 낮은 기관 대상은 품질관리컨설팅을 제공하고, 점수가 높은 기관대상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품질측정 영역 : 사회서비스 품질측정영역에서 제공기관장이나 인력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도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 사회서비스 품질측정 대상 : 사회서비스 품질측정은 반드시 이용자가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측정모형으로 개발하여 적용해야함.

7.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모형 및 체계구축 방안

·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및 목적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 경상북도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보장하여 이용자들의 욕구가 해결되며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체계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목적	· 경상북도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일정수준 이상의 수준으로 제공되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도 향상시키는 것

·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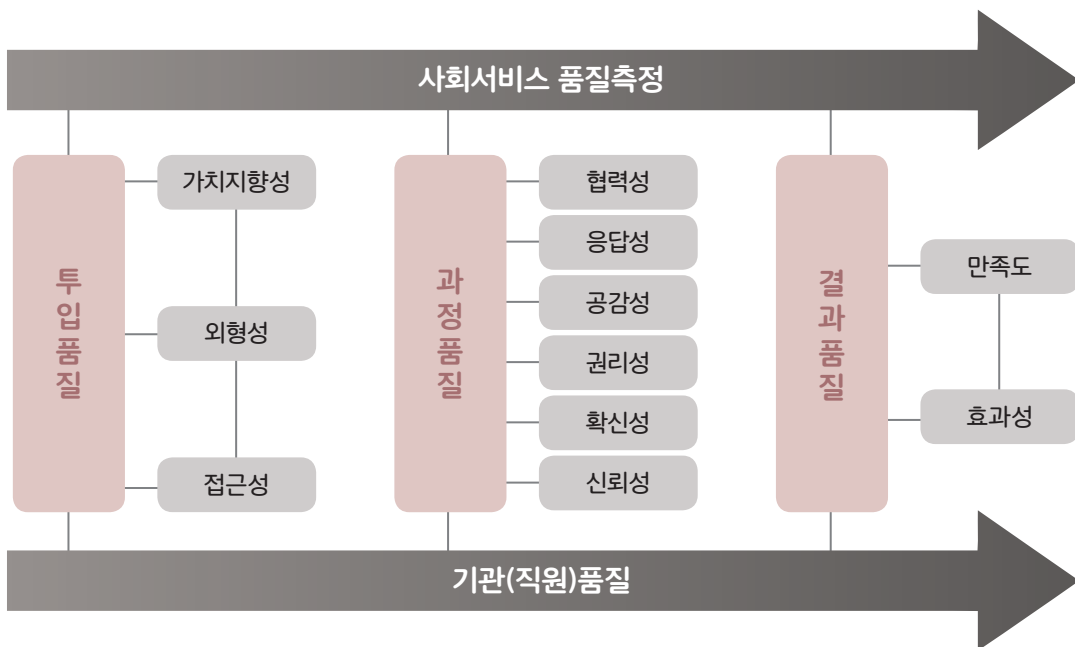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품질측정체계 구조



·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측정모형 개발

- 사회서비스 품질측정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사회서비스 품질측정모형에 적합한 양적 품질지표로 구성된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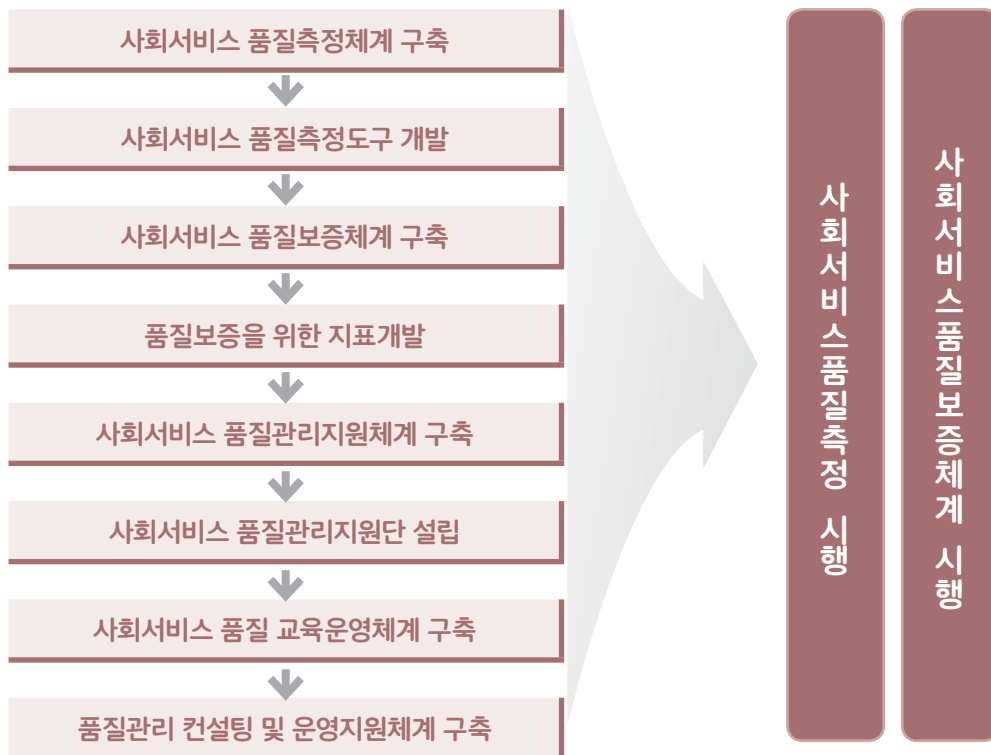




·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지원단 운영체계



·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진과정



· 경상북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지원단의 역할과 기능 및 운영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후속과제를 제안함.

【 핵심추진과제(2023~2025) 】

- 1차 년도 『사회서비스 품질측정도구 개발』
- 2차 년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지원체계 구성』
- 3차 년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보증체계 개발 및 실행방안』



참 . 고 . 문 . 헌

김근홍(2020). 독일 수발보험 관련법의 개정과 시사점: 급여와 신 평가모듈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5(1), 9~33.

김은정·최은영·정소연(2008). 사회서비스 품질접근 동향과 품질표준 설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2, 310~378.

이재필·이시경(2009).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발. 한국공공관리학보, 23(1), 1~32.

지은구·이원주(2015). 노인요양시설 성과측정모형 개발 연구. 노인복지연구, 69, 239~268.

스 페 셜 코 멘 트

SPECIAL COMMENT



2006년 이후 저출산과 노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사회서비스사업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가 품질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 역시 도민들의 행복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례를 통하여 사회서비스품질관리의 도입 및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상북도 자체적인 사회서비스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사회서비스품질유지 및 개선시키고 안정적인 사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사회서비스품질측정,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보증,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관리지원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행복재단에서 수행한 “경상북도 사회서비스품질관리지원체계구축연구”는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서비스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며 관리하는 품질관리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서 제시된 제시된바와 같이 사회서비스품질관리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경상북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포함하여 전체 도민의 행복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은구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¹⁾

김성훈(경북행복재단 선임연구원)
김문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조사배경 및 목적

- 경상북도는 발달장애인 복지증진 책무를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발달장애인 복지 발전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발달장애인 350명(당사자 및 보호자 대리응답)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37부를 회수하여 부실응답 5부를 제외한 3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 본 조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음.

2. 실태조사 결과

1) 일반적인 사항

- 조사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56.0%로 많았으며, 연령은 30대가 39.5%, 20대가 38.3%로 높게 나타났음.
- 장애등급폐지 전 장애등급은 1급이 38.9%, 2급이 38.0%로 나타났음.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77.4%, 자폐성 장애인이 22.6%였음. 중복장애 여부는 중복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21.4%로 나타났음.
- 가족과의 동거여부는 응답자의 14.8%가 따로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수는 4명 33.4%, 3명 28.9%로 높게 나타났음.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20.5%, '100만원 미만' 19.3%, '100~200만원 미만' 18.4% 등으로 나타났음. 집의 소유 형태는 62.0%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장애등급폐지 전 장애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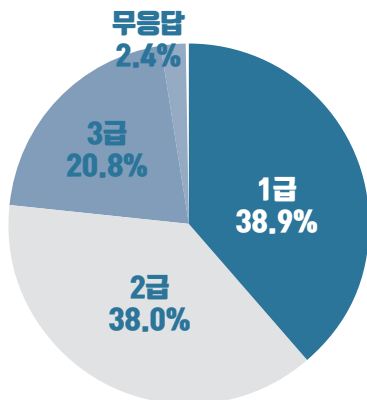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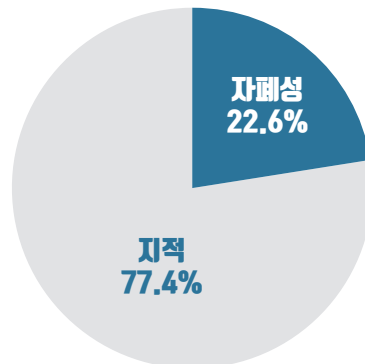


그림 2. 장애유형



1) 2022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의 용역을 받아서 진행한 제2차(2023~2027) 경상북도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의 내용 중 실태조사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2) 발달장애인 생활전반

-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필요한 도움 정도는 '일부 도움을 받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27.1%, '대부분 도움을 받아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24.1%로 높게 나타났다.
- 여가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냐는 물음에 1순위에서는 'TV/컴퓨터(게임) 인터넷'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음' 23.5%로 가장 높았음.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는 '약간 만족' 33.7%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 및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특성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이 없어서'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여가활동(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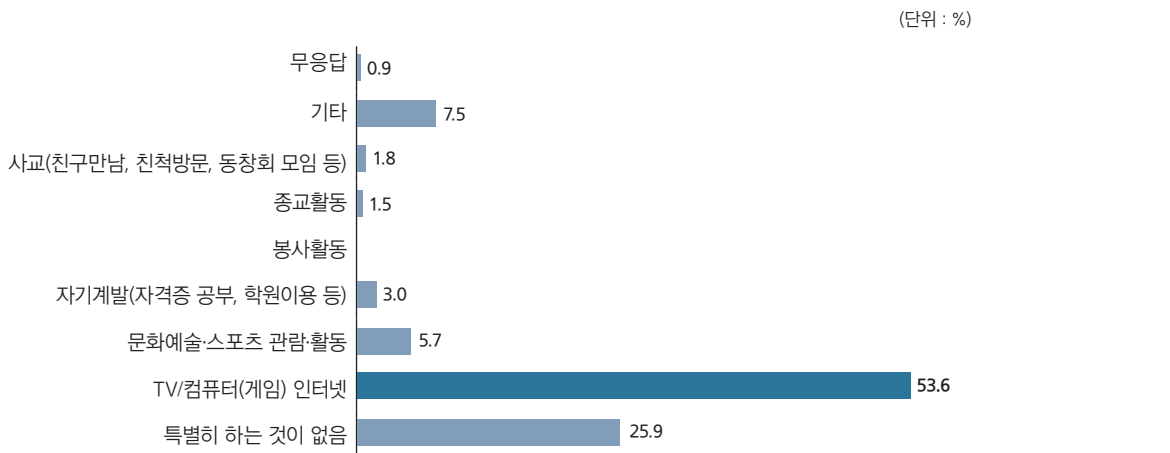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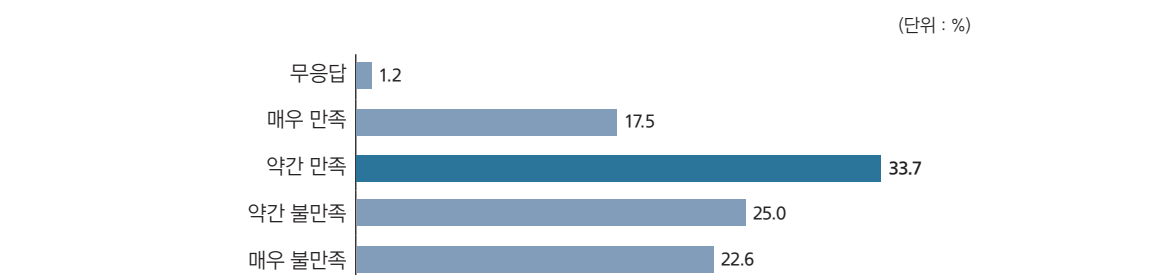


그림 4.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3) 발달장애인 건강

- 발달장애인의 건강상태는 좋은 편인 경우가 59.3%로 가장 높은 반면, 나쁜 편이 31.6%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 여부에서는 19.2%가 치료경험이 없었으며, 병원 진료의 어려움 정도는 '매우 어려움' 5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치료받지 못한 이유 1순위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이 없어서' 50.9%, '의사소통 문제' 28.1%로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도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이 없어서' 30.2%, '의사소통 문제' 26.4%로 높게 나타났다.



· '음주와 흡연은 마시지 않았음' 88.0%, '피우지 않았음' 93.4%로 음주와 흡연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운동 여부는 '전혀 하지 않음' 31.0%, '주 1~2일' 29.2% 등이 높게 나타났음.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은 '정기적 건강검진' 30.7%, '장애인전문의료기관 설치' 25.9% 등이 높게 나타났음.

그림 5. 병원 진료의 어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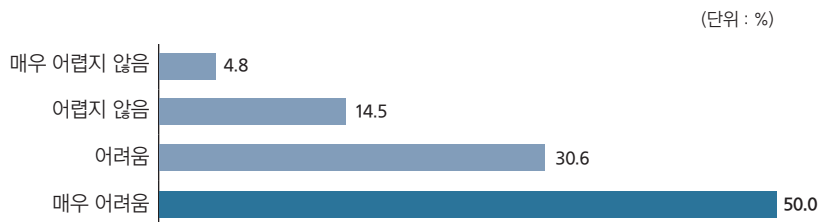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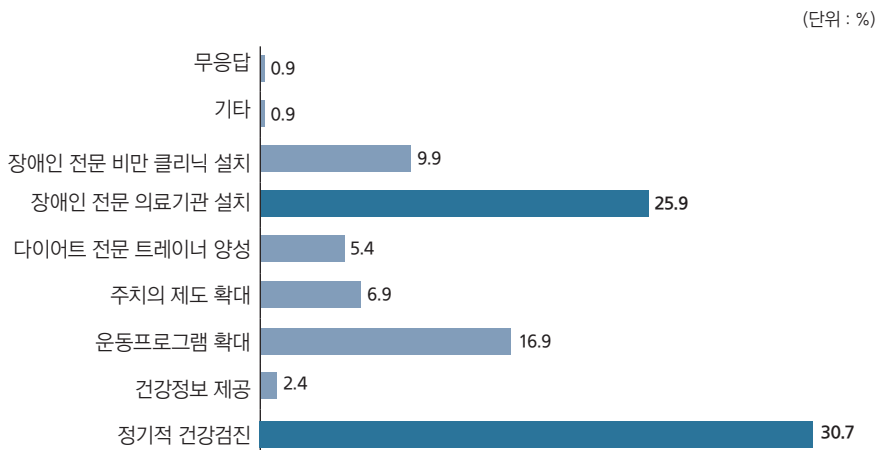


그림 6.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부분



4)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대한 문제

- 발달장애인의 자립여부는 자립시킬 생각이 없는 경우가 51.8%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자립시킬 예정 31.6%로 나타났음. 자립생활과 관련한 교육 여부는 '교육시키지 못함' 45.8%, '향후 시킬 예정' 29.8%로 나타났음.
- 직업훈련 받은 경험 여부는 '경험이 없음' 57.8%, '있다' 및 '훈련 중' 36.7%로 나타났음.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심한 장애로 훈련을 받기 어려워서'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발달장애인 '구직의사는 없다'가 50.4%로 절반 이상이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이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1순위 '장애로 인해 일을 못함' 39.8%, '적당한 일자리가 없음' 30.1%로 높았으며, 2순위에서는 '대인관계가 서툴러서' 23.8%, '적당한 일자리가 없음' 22.0% 등이 높게 나타났음.



그림 7.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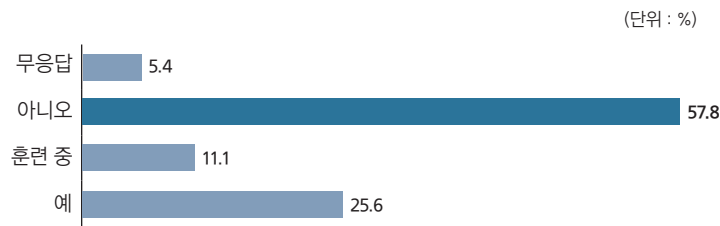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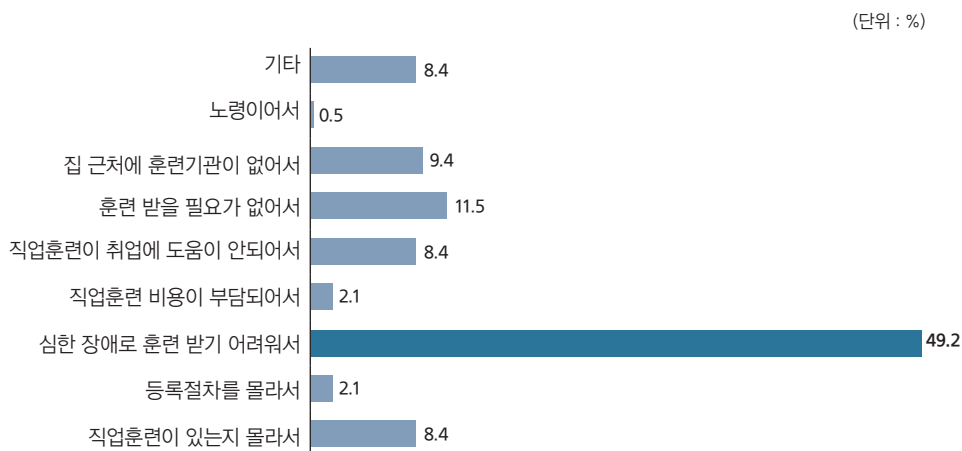


그림 8.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



5) 발달장애인의 권익

- 장애로 인한 차별 여부는 가끔 차별을 받고 있음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항상 차별을 받고 있음' 23.5%, '별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음' 22.6% 등으로 나타났음.
- 발달장애인의 의견 반영 방법은 '당사자에게 설명은 하되 보호자가 결정'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름' 24.1%,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호자가 결정' 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권익증진을 위한 중요성은 '대국민 인식 개선교육과 홍보' 42.2%로 가장 높았으며, '제도적 사회참여 방안 마련' 20.8%, '법률적 지원 확대' 14.5% 등의 순이었음.
-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달라진 정도는 '거의 없음' 48.2%, '전혀 없음' 37.3%로 80% 이상의 응답자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9. 장애로 인한 차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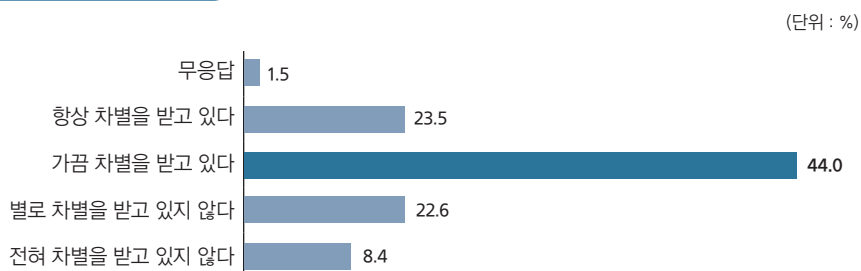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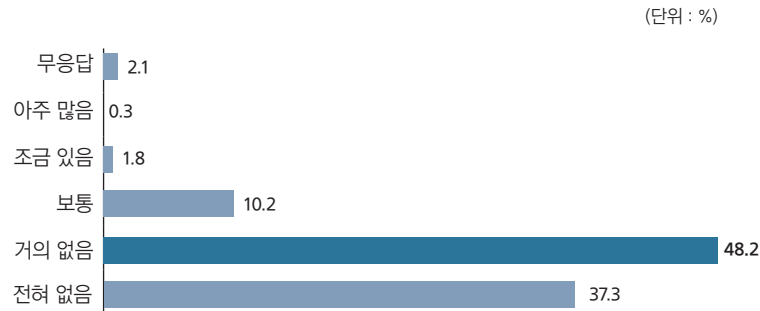




그림 10.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 달라진 정도



6)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

- 일상생활 시 다른 사람의 도움 정도는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함¹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함'² 22.6%, '전적으로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함'³ 16.6% 등의 순이었으며, 발달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부모 70.8%로 가장 많았음. 돌봄 부담감 정도는 '매우 부담됨'⁴ 3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부담됨'⁵ 32.2%, '별로 부담되지 않음'⁶ 16.3% 등의 순이었음.
- 발달장애인 돌봄에 있어서 가족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1순위는 '부모 사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의 부재'⁷ 1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⁸ 17.8%, '발달장애인의 건강악화'⁹ 10.5% 등의 순이었으며, 2순위도 '부모 사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의 부재 문제'¹⁰ 14.2%로 가장 높았음.
- 활동지원사 및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는 '이용한다'¹¹ 56.6%로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인력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충분함 정도는 '부족함'¹² 37.8%, '매우 부족함'¹³ 21.8%로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로 나타났다.
- 발달장애인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하는 점 1순위는 생계 자체가 33.4%로 가장 많았으며, '귀하사후'¹⁴ 25.5%, '건강관리'¹⁵ 20.5% 등의 순이었으며, 2순위는 '건강관리'¹⁶ 19.6%로 가장 높았으며, '신변보호(후견)'¹⁷ 16.9%, '생계 자체'¹⁸ 15.4% 등의 순이었음.

그림 11. 일상생활 시 다른 사람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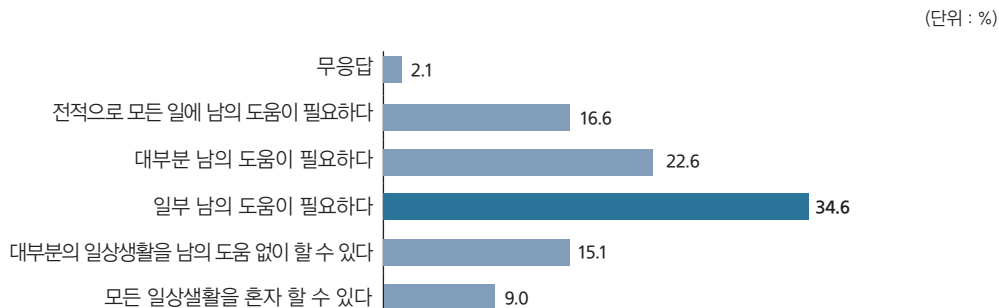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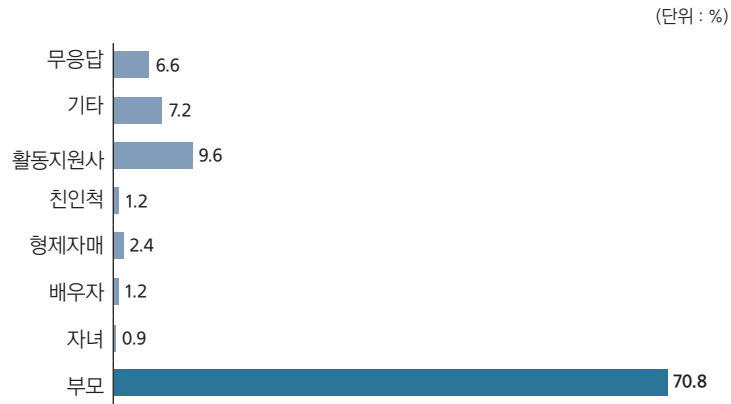




그림 12. 발달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



7)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장애부모(모임)가 3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33.7%,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9.6%' 등의 순이었음. 평생교육으로 원하는 내용 1순위는 '일상생활 훈련 교육'이 3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소통 교육' 18.0%, '건강·심리 교육' 15.2% 등의 순이며, 2순위는 '일상생활훈련 교육', '사회성 향상 교육' 각각 2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소통 교육' 15.6%, '직업준비 교육' 14.1% 등의 순이었음.
-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는 '소득보장'이 3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료보장' 17.1%, '주거보장' 15.3%, '장애인 인권보장' 8.3% 등의 순이며, 2순위는 '주거보장'이 1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보장' 15.4%, '의료보장' 12.6%, '장애인 건강관리' 10.5% 등의 순이었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시간 연장은 78.0%가 찬성하며, 18시까지 연장 운영이 40.5%, 20시까지 운영이 39.7%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3.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얻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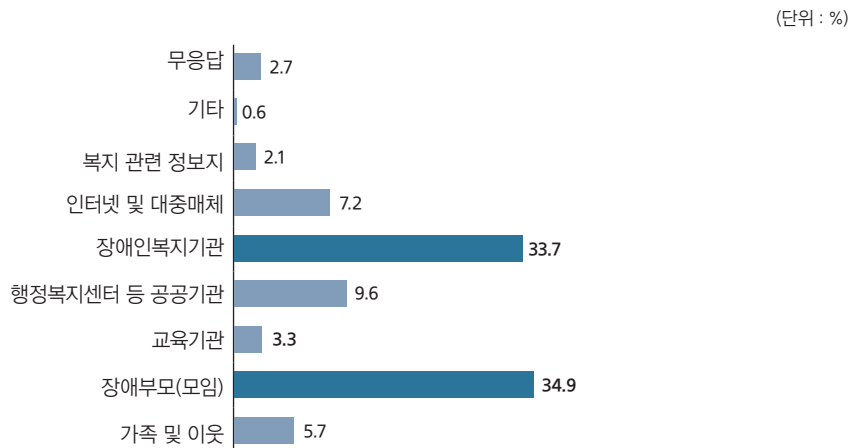




그림 1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시간 연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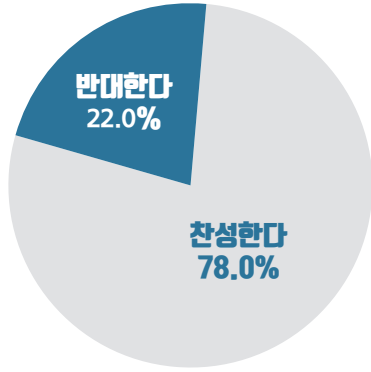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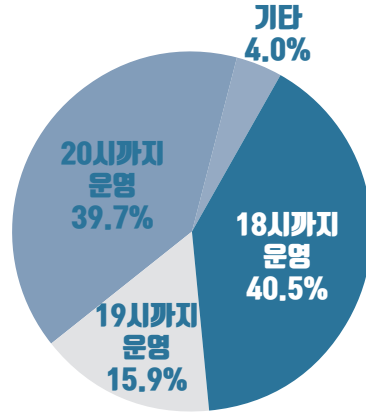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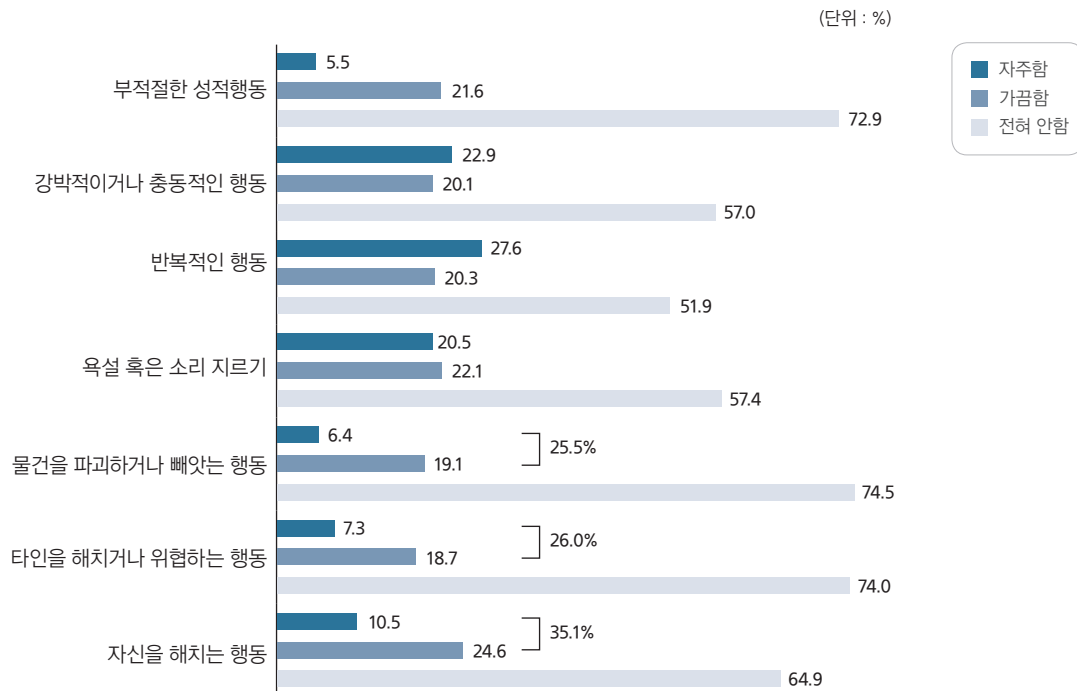
그림 15. 운영 연장 시간



8)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정도를 살펴보면, '자신을 해치는 행동' 35.1%, '타인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동' 26.0%, '물건을 파괴하거나 빼앗는 행동' 25.5%, '욕설 혹은 소리 지르기' 42.6%, '반복적 행동' 47.9%, '부적절한 성적 행동' 27.1%가 도전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3년 이내 경찰, 학교 등에 신고 당한 경험은 응답자의 19.1%가 있었으며, 3년 이내 법적 처벌 경험 5.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1년간 도전적 행동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상담은 응답자의 18.6%가 경험을 하였음.

그림 16.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정도





시사점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문화 여가활동 시간의 지원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번 조사에서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TV/컴퓨터(게임) 인터넷 이용이 53.6%,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음이 25.9%로 여가시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발달장애인의 자립 여부에 있어서 보호자의 51.8%가 자립시킬 생각이 없었으며, 자립생활과 관련한 교육도 45.8%가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부모님의 인식개선과 자립지원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셋째, 발달장애인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로 인해서 일을 못함이 3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당한 일자리가 없음이 30.1%로 높게 나타나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의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넷째, 발달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부모가 70.8%로 나타났으며, 돌봄 부담 정도는 71.7%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있어 긴급돌봄, 돌봄수당 등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고 봄.
- 다섯째,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소득보장' 36.1%, '의료보장' 17.1%, '주거보장' 15.3%로 나타나 소득, 의료, 주거 지원에 대한 국가 및 경상북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여섯째,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이용경험에 있어 도전적 행동 지원은 6.4%만 이용하고 있는 반면, 도전적 행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정도인 것에 비하면 이용경험이 낮아 도전적 행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보급이 필요함.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서 양육 및 돌봄에 대한 막막함 46.9%로 나타나 도전적 행동에 있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개발도 필요함.

본 연구는 경상북도(2022) '제2차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SPECIAL COMMENT



최근 들어 24시간 국가돌봄 체계 구축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경상북도 및 경북행복재단에서 추진한 부분에 있어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아쉬운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 하는 것이 없거나 TV/컴퓨터 게임만을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빠른 시일 내 지역의 시군에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발달장애인 취업에 있어서도 장애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비율이 39.8%로 높게 나타났는데,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한다면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가 심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경북형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이루어져 합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부모가 70%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발달장애인 가정도 많은 상황이고, 또한 가족의 여러 행사도 참석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위해 긴급돌봄 체계를 202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몇 군데의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전면 확대 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경상북도부모회 회장 김재원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경북행복재단의 역할과 과제

진재문(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머리말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이 넘었다. 국민연금개혁, 최저임금, 사회서비스 개혁 등 여러 사회보장의 정책 아젠다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해집단 사이에 뜨거운 정치적 갈등이 부각되기도 한다. 보수와 진보의 정권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과 진영의 논리가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부딪히는 국면이다. 그 결과 보편주의-선별주의, 증세-감세, 공공-시장 등의 형태로 다양한 전선을 그려내고 있다.

이런 전통적인 사회보장 쟁점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이고 노동력 확보, 돌봄과 간병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노동 형태를 양산하고 있고, 동시에 기계·로봇·인공지능은 인간의 노동을 급격히 대체하면서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심화되는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은 사회보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베버리지 시스템에 기초한 20세기 복지국가 체제의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21세기에 맞는 복지개혁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새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보장의 기본틀이 단기적으로 지역의 사회보장을 규정하는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 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지방 단위에서 사회보장을 규정하는 환경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바람직한 대응 전략의 틀을 구상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할 것이다.

본고는 현 정부가 제시한 사회보장의 기본전략과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경상북도와 경북 사회복지의 싱크탱크인 경북행복재단이 참고할 수 있는 과제의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2. 새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

2022년 5월에 출범한 현 정부의 사회보장 방향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출범 1년이라는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복지에 대한 기본전략이 올해 5월에야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문건을 중심으로 현 정부 사회보장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의견을 더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보장의 방향성은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 5. 31.).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한 복지국가 전략이 금년 5월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제시된 복지국가 전략의 내용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선별주의와 시장성이 강화되고, 감세 기조 속에서 사회보장 관련 예산 확대가 상당히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 개요

비전	비전을 위한 중점 추진 내용	핵심추진과제 및 목표	핵심추진과제 내용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 약자 복지 - 서비스 복지 - 복지재정 혁신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 효율적 복지제도 운용	· 복잡한 제도의 패키지화를 통한 전달체계 간 연계 강화 · 이용자 친화적 제도 구축 · 상시적 제도 관리 강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도모	· 사회서비스의 중산층 확대 · 복지기술, 적극적 규제 개선 및 투자, 경쟁여건 조성 등

1) 국가책임의 선별적 제한 - ‘약자 복지’

새 정부는 약자에 집중하는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명확한 선별주의 지향성을 보여준다. ‘생산적 복지’,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 역대 정부에서도 복지에 관련하여 핵심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제도적 기능, 운영 원리, 성격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구성했다. 반면 현 정부의 ‘약자 복지’는 국가의 직접적 보장 책임을 약자라는 선별된 집단에 집중하겠다고 명시한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약자에 집중하여 목표 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약자에게 두텁게 지급한다’라는 언급에서 목표 효율성에 대한 지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기존 정부에서 투입한 복지재정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았다는 평가를 전제로, 복지재정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재정의 효율적 지출과 지출 효과를 분명히 도출하겠다는 것은 실제 운용 결과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으며, 정부의 자율적인 정책 기조의 선택으로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만한 요소도 분명히 내재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의 예산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급여를 두텁게 주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자를 줄여야 하고 급여대상자를 증가시킬 경우 급여 수준은 당연히 낮아진다(보편주의 한계). 현재의 선별적 약자를 고정된 수로 하여 두텁게 지급할 경우 재정 투입액의 증가는 불가피하거나, 다른 제도나 프로그램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약자 복지가 반드시 재정 효율성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약자 복지가 공공부조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우선 합리적인 선별 기준(약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그것이 적절한 기본생활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나아가 ‘두터움’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수급의 유연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2) 국가책임의 제한 - 민간 역할의 확대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상에 대하여 논자에 따라 민영화나 시장화를 언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비중을 볼 때, 국가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같은 사례가 많지 않다. 민영화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이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민간에 지원되는 국가의 사회서비스 예산이 상당 부분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민간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¹⁾

1) 보건복지부 통계연보(2022)에 따르면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결핵 및 한센인,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하는 시설 비중은 공공이 14.3%, 민간이 85.7%를 보이고 있다(전혜원, 2023)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민관협력에 기반한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는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민간 주체의 비중을 늘려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다.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혼합(welfare-mix)으로 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가의 실패가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에서 일정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및 시장의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대두되고 있다. 욕구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크기와 성격에 관계없이 경제적 구매력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여 사회서비스의 이중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 인프라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민간자본의 유입과 영리추구를 허용한 결과 도시지역의 공급과잉과 농어촌 지역의 공급부족을 초래하고 질 향상 경쟁이 아닌 비용절감 경쟁(특히 인건비)으로 인하여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전혜원, 2023). 그만큼 시장화와 사업화는 양날의 칼임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시장원리의 도입이 추진될 때도 최소한 시장과 힘의 균형 및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고 교훈이다.

3) 감세와 공공 사회복지예산 제한 가능성

새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적 전략 기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재정 분야이다. '약자 복지'와 '사회보장의 시장 및 민간 역할 확대'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 기초와 연계하여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사회보장제도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재정 원천은 세금이다.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내세웠는데, 법인세, 증부세 등의 부자 감세의 맥락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2027년 합계 60조 3,083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하지만 금년도 세수 실적은 전망치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소가 컸는데 계속되는 수출감소와 경제성장의 위축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출과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올 하반기와 내년에도 세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의 감소는 앞으로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할 사회보장 예산을 제한하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명확하다. 감세는 곧 사회복지의 축소(최소한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경우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들은 사회복지의 축소를 명시적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중적 인기를 위해 감세를 약속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고 난 후의 양상은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압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 정부에서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감세 정책의 기초가 조정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의 공공성 확대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명확히 경험한 바 있다. 문제는 사회보장의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심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의 사회적 위협에 따른 새롭게 확대되는 복지 수요에 대한 공공의 책임 범위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감세' 기초는 '약자 복지', '사회서비스의 규모화 및 사업화'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 새 축이 될 것이다. 이는 시장의 자유와 주도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는 지금까지 진화해온 사회보장 시스템 유지 및 사회보장의 공공성 강화 요구와 긴장 관계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화나 시장화가 가능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는 매우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사회보장의 혁신을 위한 과제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의 거대한 변화는 국가는 물론 지방 차원에서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고민과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선별주의적 약자 복지 강화, 민간의 사업화 및 시장화, 사회보장 재정의 축소라는 기본적인 국가 정책의 틀에 적응하면서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를 전개해야 한다. 민간의 참여와 주도성을 확대하면서도 공공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는 상당히 힘든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수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단기적이고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몇 가지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1)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모색 - 지역사회와 관계 중심의 시스템

예상되는 사회보장예산의 제약 속에서 경상북도의 공공복지 주도성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경상북도 지역이 사업화 및 시장화의 진전을 토대로 사회보장의 틀을 설계할 정도로 민간의 역량이 성숙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사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시장화 및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가장 유력한 방향은 지역 내에서 작동하는 공동체성과 주민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관계에 토대를 두고 민간과 공공의 저비용 서비스 공급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 역시 쉽지 않겠으나 민간의 잠재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공공의 역할에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향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참고할 만한 것이 2018년 힐러리 코탐(Hilary Cottam)이 『Radical Help』에서 제시한 ‘관계’에 기초한 사회복지(혹은 복지국가) 패러다임이다. Cottam(2020)에 따르면 베버리지 시스템에 기초한 20세기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은 시장 실패를 극복하면서 국민의 미충족 욕구(특히, 물질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베버리지 시스템은 ‘산업주의적 관료주의’의 전형으로서 많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그 결과 재정이 투입되는데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대상 주체의 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아닌 무능한 시스템이 되었다고 본다.

Cottam(2020)은 ‘좌파는 돈을 더 써야 한다고 하고 우파는 복지체제를 축소하자고 하는데 양자 모두 돈과 관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주체, 주도, 자율, 참여, 협력 등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람 중심의 관계를 구축하여 그 바탕 위에 적절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복지예산의 부족을 극복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경북행복재단 같은 지역 기반의 연구 조직이 다양한 원리와 기술들을 연구하고 제시하여 경상북도의 사회보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의 사회보장행정 구조에서 산업주의적 관료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다.

2) 경상북도 복지의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의 다양한 복지 사업이 광역 단위(경북)로 내려올 경우 그 사업들을 지역사회에 통합적으로 조정·융합하여 가장 적절한 서비스 작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싱크 탱크로서 경북행복재단과 실현 주체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컨트롤 타워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공공, 민간, 혹은 공공-민간의 사회보장 실현 과정에서



중복, 누락, 비효율 및 비효과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질 수 있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된다.

컨트를 타워는 크게 관리·조정 기능과 연구·설계 기능이 결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경북행복재단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각종 복지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지역의 전문가, 주민, 복지 종사자, 시설 등 다양한 주체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조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의 법적 근거를 가진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면 지역의 복지역량을 집중하고 논의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및 복지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지만, 발전 가능성과 잠재성은 매우 큰 조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북행복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모든 정책, 특히, 사회서비스 정책은 전국적 단위로 설계되기 때문에 지역 특화된 내용으로 구체화 되기 힘들다. 경북행복재단은 정부의 취지와 목적이 지역사회에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내용과 이슈를 재정 의하거나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정책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반대 과정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요구와 주장이 적절히 요약되고 가공되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변주를 해야 한다.

3) 공공 사회보장 행정의 수평적 협력 강화·간막이 현상 극복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에는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서비스’로 바뀌면서 복지와 보건의료를 넘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국가의 사회서비스 책임 범위가 확대되었다.

문제는 사회서비스 책임 범위가 법적으로 확장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 부서 사이에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 부서 내의 협력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단계에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부서는 주로 복지 관련 부서이고, 문화, 주택, 환경 등 다른 부서의 종사자들은 논의 과정 참여에 매우 소극적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공식 논의 과정에도 주로 복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어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법의 취지를 행정 현장에서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문화의 지체 현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 관련 행정부서 간의 수평적 협력 구조의 확립은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물론 경북행복재단과 같은 연구 조직에서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화초를 가꾸듯이 만들어야 한다.



4. 맺음말

어느 시기이든 사회보장 환경은 변화한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힘과 영향이 강력한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이 지역주민에게 맞는 사회보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단위에서 경북 도민의 삶과 조화되는 경북만의 사회보장을 구축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항상 스스로 물어야 한다. “경상북도는 어떤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만들고 있는가?” 급변하는 거시적 환경 변화와 정권교체기마다 겪어야 하는 정책 기조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본다. 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 대공황, 세계대전, 오일 쇼크, 금융위기 등 큰 사건과 외부 충격을 공유하면서도 스웨덴형, 미국형, 영국형, 독일형 등 다양하고 독자적인 복지국가가 등장하고 유지되고 있다. 한 나라의 작은 행정 단위들도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논의하고 몇 가지 과제를 언급했지만, 이러한 과제가 의미를 가지고 현장성을 가지려면 결국은 경상북도와 경북행복재단이 지속적으로 경상북도 사회보장의 모습에 대하여 숙고하면서 이상적 실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클 것이다. 많은 성취와 발전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회예산정책처. (2022).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건복지부. (2022).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회보장 전략회의: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2023. 5. 31).

전혜원. (2023).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발언에 숨겨진 것들. 시사IN Vol. 825.

Cottam, Hilary. (2020). 래디컬 헬프(Radical Help): 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박경현·이태인 옮김). 착한 책가게.



Talk, Talker

청렴똑똑키 소식지

| 경북행복재단 청렴이야기 제1호 |

경북행복재단 반부패·청렴 활동 소식



[청렴 의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 공유]

경북행복재단 내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의식 확산을 위해 매월 포스터를 만들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항상 반부패·청렴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경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경북행복재단은 임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패방지경영 지식을 쌓기 위해 부패방지경영 교육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반부패·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청렴지식, 쌓고 또 쌓기!

Q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의 의미합니다. ※유가증권 예시: 상품권, 기프트콘, 관람권

Q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이 가능한가요?

A 한우는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20만원

Q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경조사 범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생일, 돌, 집들이,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가 아님.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금지제도 온라인 설명회



밝은 내일, 도민이 행복한 경북!

MISSION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VISION

지역 사회서비스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기관



경영목표 & 추진전략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대응

- 보건복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및 기초통계 구축
- 사회서비스 협력체계 기반조성 및 학술대회 개최
- 도·시·군 및 현장 요구의 맞춤형 대응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기관 현장 지원

- 사회서비스 현장 개선과제 발굴
- 컨설팅·평가인증
- 시설운영·평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강화

보건복지 관련 교육 지원

- 전문교육콘텐츠 개발·운영
- 사회서비스 현장 교육 수요 조사
- 교육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 구축

- 윤리·인권,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확산
- 노동환경, 안전 등 사람중심 안전사회 구축
- 도민참여, 상생협력 등 참여중심 협력 사회 구축



3년 연속(2020-2022)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

김동화 | 정상기 | 공지훈